

# 보도자료

배포 날짜

2026. 6. 22. (월)

총 3페이지

## 2026년 6월 22일 전남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릴레이 성명발표 5

구분

보도요청

수신

각 언론사 여성·아동 담당

발신

성착취(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

담당

성착취(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  
십대여성인권센터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팀장 한다솜  
[www.teen-up.com](http://www.teen-up.com) / 02) 6348-1318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0 대일빌딩 7층

릴레이  
성명발표  
담당

센터명

전남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총 3장

담당자

윤은미 센터장

연락처

061-810-1318

## 성명서

디지털 성착취 대응의 완성은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강화다!

정부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인력 확충과 시설 전환, 예산 확대에 즉각 나서야 한다!

디지털 성착취 범주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빠르고 은밀하게 진화하고 있다. 정부와 관계 기관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착취 범주는 SNS, 채팅 플랫폼, 익명 커뮤니티 등을 매개로 빠르고 은밀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양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온라인 공간 속 범죄를 조장하고 아동·청소년을 유해 환경에 노출시키는 디지털 성착취

는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범죄이며, 플랫폼에 대한 책임 강화는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디지털 기술 발전이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존엄보다 우선시될 수 없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플랫폼 규제와 관리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구조하고, 온전한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가 강화될 때 비로소 디지털 성착취 대응 정책은 완성될 수 있다.

2025년 전국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건수는 39,632건에 이르렀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함께 피해 양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조건만남 형태의 성착취뿐만 아니라 온라인 그루밍, 디지털 성범죄, 폭행·갈취 등 복합적인 피해를 경험하는 아동·청소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전남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전남센터)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상담, 의료·법률·학업·자립·심리 지원은 물론 온·오프라인 아웃리치, 홍보·캠페인,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회복을 돕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는 넓은 권역과 농·어촌, 도서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지역 간 이동 거리가 매우 길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청소년 한 명을 지원하기 위해 장거리 이동과 수차례의 현장 방문, 유관기관 협력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광역 단위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피해 아동·청소년의 발견부터 회복까지 책임지는 현장은 여전히 최소 인력에 의존하고 있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공백 없는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인력과 시간의 물리적 한계가 매우 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 지원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감당해야 하는 현장의 인력과 예산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는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지난 6년간 국가 피해자 지원체계의 최일선에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증가하는 피해 규모와 복합적인 지원 수요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상근 종사자는 센터당 단 3인에 불과하여 현장의 인력과 예산이 현실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는 법률에 근거한 피해자 지원체계임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시설이 아닌 위탁 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전문성 축적이 필수적인 분야임에도 3년 단위의 불안정한 운영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현장의 경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조 이후의 지속적인 '회복'이다. 아동·청소년들이 피해 사실을 세상에 털어놓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그 누구도 확인할 수 없다. 어렵게 도움을 요청한 아동·청소년들에게는 심리치료와 의료 지원, 학업 복귀, 가족관계 회

복, 자립 지원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의 촘촘한 밀착 지원이 필수적이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회복은 단순히 하나의 사법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회복을 언제까지나 현장의 헌신과 사명감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회 구성과 2027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앞둔 지금은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이 말뿐인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 인력 확충과 운영 안정화를 위한 예산 반영이 이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가 디지털 성착취 대응 강화를 외치면서 정작 피해자 지원체계의 내실화와 강화를 외면한다면 그 어떤 정책도 결코 완성될 수 없다.

**이에 전남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온전한 회복을 위한 현장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위탁 사업 형태의 불안정한 구조를 탈피하고,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독립적인 전문 지원시설로 즉각 전환하라!

하나. 전라남도도 넓은 지리적 특성과 현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 차원의 책임을 다하고 예산을 전폭 지원하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회복은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이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회복은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세우는 일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정부는 더 이상 현장의 일방적인 헌신에만 기대어서는 안 된다. 구조 이후의 종국적인 회복까지 책임지는 튼튼한 지원체계 없이는 디지털 성착취 대응도 완결될 수 없다. 정부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회복을 위한 책임을 예산과 제도로 분명하게 증명하고,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든 안전하게 보호받고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다하라!

2026. 6. 22.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전남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